企業集團의 現況과 特徵:
比重 · 市場地位 · 多邊化 · 所有構造

李 在 亨

(本院 專門研究員)

* 필자는 본 연구에 있어서 통계자료작성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통계청의 변효섭 서기관, 김성일 씨, 공정거래위원회의 박귀찬 사무관, 김정기 사무관, 초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본원의 임영재 박사 및 동아대 박병형 교수, 원고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김승진 주임연구원 및 김현애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要　　約◇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및 다변화가 기업집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0대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지고 있으며,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소수의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집단은 산업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는 반면, 중·하위집단은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시장에 진출해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대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Ⅰ. 序　論

기업집단(소위 '재벌')은 우리나라 산업의 진화과정과 현상을 가장 단적으로 상징하는 산업조직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개발연대 이후 "수출입국", "중화학공업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각 시대를 특징짓는 산업화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기업집단이 있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한국산업발전의 역사가 곧 기업집단의 역사이기도 했으며, 기업집단의 변신과정이 바로 한국산업의 발전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제력집중)과 기업집단의 생성·성장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특징들로 인하여 1970년대 이후 경제력집중 문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 끊임없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기업집단을 보는 시각도 정경유착, 특혜, 부동산투기, 폐쇄적·집단적인 소유·경영체계 등 성장과정과 경영행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수출증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산업의 발전 등 기업집단이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긍정적 시각이 공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과거의 특혜·정경유착 등의 부정적 측면이 오늘의 기업집단을 있게 한 충분조건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지난 30여년간에 걸친 우리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모두 기업집단의 공로로 돌리는 것도 부적절할 것이다. 기업집단은 여타 기업에 비해 한걸음 빨리 우리 산업의 발전방향에 편승함으로써 규모를 확대하여 왔고, 이러한 흐름에 순응하지 못한 기업집단들은 도태되어 갔던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의욕

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집단의 참여 없이는 의도하는 방향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많은 지원·육성정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혜택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산업정책적 방향에 순응한 기업집단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기업집단의 성장과정과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친 득실이 어떠하였든, 현재 우리의 산업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대한 기업집단의 존재는 '현실'이며, 이 기업집단 문제는 거의 모든 산업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의 현황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기업집단정책을 포함하는 산업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집단'이란 말은 공정거래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로서, 이보다는 오히려 '財閥'이라는 말이 학계나 일반인들에게 좀더 친숙한 개념일 것이다. '기업집단'이라는 용어가 어딘지 좀 무미건조하며 가치판단을 일체 배제한 딱딱한 말이라면, '재벌'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함축적으로 응축한 좀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과 재벌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은 "동일인[1]이

1) 동일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으며, 회사일 수도 있다. 동일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가운데 당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 및 동일인 혹은 이들 친인척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조합,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 동일인의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중 당해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동일인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의 순위가 1~30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의미한다.[2)]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戰前의 일본 재벌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일본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재벌을 "독점자본 내지는 금융자본"으로 정의하였고, 또 일부학자들은 "持株關係를 통하여 횡단적으로 지배하는 기업형태, 즉 콘체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대해 森川英正(1978)은 기업집단을 "부호의 가족·동족의 폐쇄적인 소유·지배하에 성립한 다각적인 사업경영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재벌(혹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변형윤(1975), Jones and Sagong(1980), 李奎億·李成舜(1985), 服部(1986), 鄭求鉉(1987), 유상진·이상문(1987), 김석기(1987), 趙東成(1990), 姜哲圭·崔廷杓·張志祥(1991), Fields(1991), 孔柄湜(1995) 등이 각각 나름대로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3)]

이들 정의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가운데는 기업집단 자체의 특징보다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나열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속성은 ① 거대 기업집단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② 이들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이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으며 그들 계열기업이 개별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③ 계열기업간 복잡한 지분관계와 기업집단 총수 및 가족의 소유지분에 의한 기업소유의 집중이 높다는 점, ④ 계열기업간 통합적 경영구조 및 집단적·협조적·상호의존적 기업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

2)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姜明憲(1995).

본고에서는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앞의 세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이 기업집단의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기업집단의 비중과 특성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기업집단의 시장력, 다변화, 소유구조의 특징을 개관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기업집단의 규모 및 시장성과가 시장 및 생산구조 변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Ⅱ. 企業集團의 比重

1. 産業構造의 變化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현황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업집단의 성장은 산업발전 및 구조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뒤에서 논의할 기업집단의 성장추이 및 현황도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국내총생산(GDP) 구성비의 변화와 각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을 경상가격기준으로 보면,[4]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제1차산업부문(농림어업 및 광업)의 급속한 비중감소와 건설업 및 금융·서비스업의 비중증대일 것이다. 이는 경제의 서비스

4)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불변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타당하겠지만, 뒤에 나오는 각종 통계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의 편의를 위해 경상가격을 채택하였다.

화·소프트화라는 세계경제 전반의 흐름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업의 경우는 1983~88년간에는 비중이 늘어났으나, 1988~94년간에는 비중이 5.7%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광공업통계를 통해 사업체[5] 규모별 광공업부문의 구조변화를 보면, 1983~94년간 종업원수 100인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체 숫자가 크게 늘어났는 데 비하여, 중·대규모 사업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특히 종업원수 500인이상의 사업체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산업의 성장은 기업수의 증가에 의한 부분과 기업규모의 증가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1+\Delta S) = (1+\Delta N)\times[(1+\Delta S)/(1+\Delta N)]$$

(ΔN과 ΔS는 각각 사업체수 및 출하액 증가율을 나타내며, 따라서 $(1+\Delta S)$=총출하액 증가배수, $(1+\Delta N)$=사업체수 증가배수, $[(1+\Delta S)/(1+\Delta N)]$=사업체당 출하액 증가배수가 된다.)

의 항등관계가 당연히 성립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광공업부문의 성장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83~94년간 광공업부문은 출하액 기준으로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사업체수 증가에 의해 기인된 부분과 사업체당 출하증가에 의한 부분이 서로 비슷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그런데 사업체규모별 사업체당 출하액증가율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 데 비해 사업체수는 중소규모의 사업체일수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광공업부문에서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중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 것이다.

---

5) 사업체(establishment)란 생산의 기본단위로서 제조업의 경우 '공장'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한 개의 기업이 다수의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광공업통계에서는 사업체를 조사의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표 1〉 事業體 規模別 成長要因

(단위 : 연평균증가율, %)

	총출하액증가율			사업체수증가율			사업체당출하액증가율		
	83~88	88~94	83~94	83~88	88~94	83~94	83~88	88~94	83~94
5~ 9인	19.0	32.8	26.3	5.1	12.9	9.2	13.2	17.6	15.7
10~ 19인	23.8	25.7	24.8	10.6	7.6	9.0	11.9	16.8	14.5
20~ 49인	26.1	20.6	23.1	12.3	3.0	7.1	12.3	17.1	14.9
50~ 99인	21.2	16.1	18.4	8.3	-0.3	3.5	11.9	21.6	14.4
100~199인	20.6	13.6	16.7	6.9	-3.4	1.1	12.8	17.6	15.4
200~299인	12.1	14.9	13.6	1.7	-2.7	-0.7	10.2	18.1	14.4
300~499인	17.2	9.7	13.0	5.3	-6.5	-1.3	11.3	17.3	14.5
500인이상	15.2	11.5	13.2	4.5	-5.8	-1.2	13.5	18.4	14.6
제조업전체	17.2	14.2	15.5	8.5	7.0	7.7	8.0	6.7	7.2

資料 : 통계청, 『산업센서스보고서』, 각년도 및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로부터 계산.

이 표에서 또 한가지 알 수 있는 점은 1983~88년간과 1988~94년간의 광공업부문 성장패턴이다. 1983~88년간은 3저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제조업 호황의 시기였으나, 1988~94년간은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시기였다. 호황기에는 특히 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수가 급격히 늘어나 성장이 가속되지만, 침체기에는 사업체수 증가의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경제력집중 변화추세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현상이다. 즉 기업집단 계열사업체수는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하여, 호·불황에 따라 산업전체의 사업체수의 변화에 의해 광공업부문 전체 출하액이 크게 변화됨으로써 기업집단의 점유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6)]

〈부표 1〉과 〈부표 2〉에는 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산업별로

6) 이에 관해서는 李在亨·劉承昊(1994)에서도 1970~88년간의 통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광공업부문의 구조와 성장패턴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이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두 표에서 광공업부문의 성장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30)", "전기기계 및 변환장치(3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2)",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33)", "자동차 및 트레일러(34)" 등 고기술부문의 성장이 현저하고, 이들 부문에서는 특히 사업체수의 급격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企業集團의 比重

경제력집중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단순한 의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전체(예컨대, 국민총생산 혹은 국내총생산)에서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몇차례 추계가 시도되기도 했으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司空壹(1980)은 1978년의 30대기업집단의 대GNP비중을 약 17.1%로 추계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은 1992년의 경우 30대기업집단이 국민총산출의 32.2%, GNP의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7][8] 또한 李奎億·李成舜(1985)은 1982년의 국세청 법인세자료

7) 30대재벌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司空壹(1980)과 韓國經濟研究院의 추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司空壹 추계		韓國經濟研究院 추계			
	1973	1978	1982	1985	1990	1992
30대재벌총매출액/국민총산출	-	-	28.5	29.7	28.5	32.2
30대재벌부가가치/국민총생산	9.8	17.1	7.3	10.6	10.7	11.9

8) 이러한 추세는 대개 재벌계열기업의 부가가치 내지는 총생산액(혹은 매출액)을 구하고 이를 GNP 등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구해진 숫자인데, 분모가 되는 GNP가 추계에 의한 통계이므로 이를 통해 계산된 숫자의 절대치 자체

〈표 2〉 鑛工業部門 30大企業集團의 比重(1994)

(단위 : %)

기업집단계층	출하액	종업원수	자산액	부가가치
상위 5위	24.6	11.1	25.6	24.0
상위10위	32.1	13.7	35.1	30.2
상위15위	35.0	15.2	39.8	32.7
상위20위	36.8	16.2	41.3	34.1
상위25위	38.3	17.0	43.0	35.7
상위30위	39.6	17.7	45.0	36.9

를 이용하여 30대기업집단이 총법인기업 자산의 18.5%, 매출액의 39.8%를 차지한다고 계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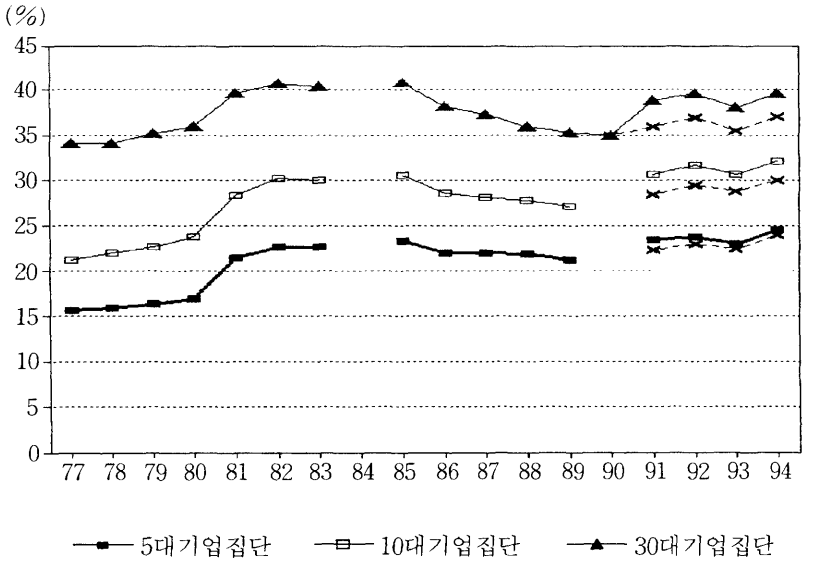
〈표 2〉에는 1994년 광공업부문에서 30대기업집단[9]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나 있다. 30대기업집단은 1994년 현재 광공업 총출하액의 39.6%, 자산의 45.0%, 부가가치의 36.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17.7%로 여타 지표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집단 계열사업체의 경우 규모가 크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동장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대체로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화학, 기계, 전자, 운송장비 등의 산업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도 고용집중률이 낮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에는 1977~94년간 광공업부문의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30대기업집단의 점유율 변화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1977~82년간 30대기업집단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

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동일한 기준에서 계산된 숫자라면 변화추세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9) 광공업부문 30대기업집단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자산 기준으로 지정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위 집단의 경우 어떠한 기준을 택하더라도 다소간의 순위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양쪽 자료에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양자의 기준에 의해 30대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집단 구성은 거의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鑛工業部門 30大企業集團의 比重變化 推移(出荷額基準)



註 : 1991년 이후의 점선부분은 과거통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의 추세임.

다가, 1982~85년간은 점유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후 1990년까지 그 비중은 급속히 낮아졌으나, 1991년에 점유율이 갑자기 상승한 이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눈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1981년과 1991년 양년도에 30대기업집단의 비중이 갑자기 상승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력집중이라는 구조적 특징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돌출변수로 인한 것이다. 즉 1981년의 경우는 당시 국내 최대의 제조업체로서 광공업부문 전체 매출액의 약 4%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던 유공이 민영화되어 30대 집단의 계열기업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며,[10] 1991년의 경우는 30

10) 1981년에 선경이 유공을 인수함에 따라, 출하액 기준으로 10위권에 머물던 선경이 일약 제1위 기업집단으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선경의 순위는 몇년간 유지되었다.

대기업집단의 선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인을 제거한다면, 30대기업집단의 비중은 '1977~81년=다소 증대, 1981~85년=현상유지, 1985~90년=급격한 하락, 1990~94년=근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1970년대 후반 이후 경기의 변동을 감안하여 이 그림을 보면 경기와 기업집단의 비중간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의 석유위기 이후 1980년대 전반기까지는 경기가 침체기에 있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유례가 없는 활황을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는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그림 1]과 비교한다면, '호황기=기업집단비중 감소, 침체기·안정기=기업집단비중 증가'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성장기 내지 호황기에는 수많은 중소규모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활동에 의해 성장이 선도됨으로써 기업집단의 비중이 낮아지다가, 안정기에 들어서면 이들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집단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상위 5대기업집단의 동향과 경제력집중간의 관계라 할 것이다. 30대기업집단의 점유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위 5대기업집단의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에 따라 30대기업집단 가운데 상위 5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졌으며, 하위기업집단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경제력집중의 문제도 실상은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0대기업집단내 규모격차의 확대는 〈표 3〉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표에는 전산업 및 광공업부문에 있어 30대기업집단 중 상위 5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위 5대기업집단과 하위 5대기업

〈표 3〉 企業集團間 規模隔差(賣出額 基準)

(단위 : %, 배)

	전산업[1]		광공업부문[2]	
	30大 중 5大비중	(상위5대)/(하위5대)	30大 중 5大비중	(상위5대)/(하위5대)
77			46.0	7.1
82	56.5	16.0	55.5	11.9
88			60.8	15.6
92	64.4	20.5	59.7	17.2
94			62.1	18.6
95	66.5	32.8[3]		

註 : 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자산기준 3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규모격차임.
2) 광공업부문 출하액기준 3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함.
3) 불과 3년간에 상하위 기업집단간의 격차가 갑자기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이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데서 오는 매출액과 자산규모간의 불일치, 하위 기업집단의 구성의 변화에 따른 업종구성의 변화 등에 의한 원인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 숫자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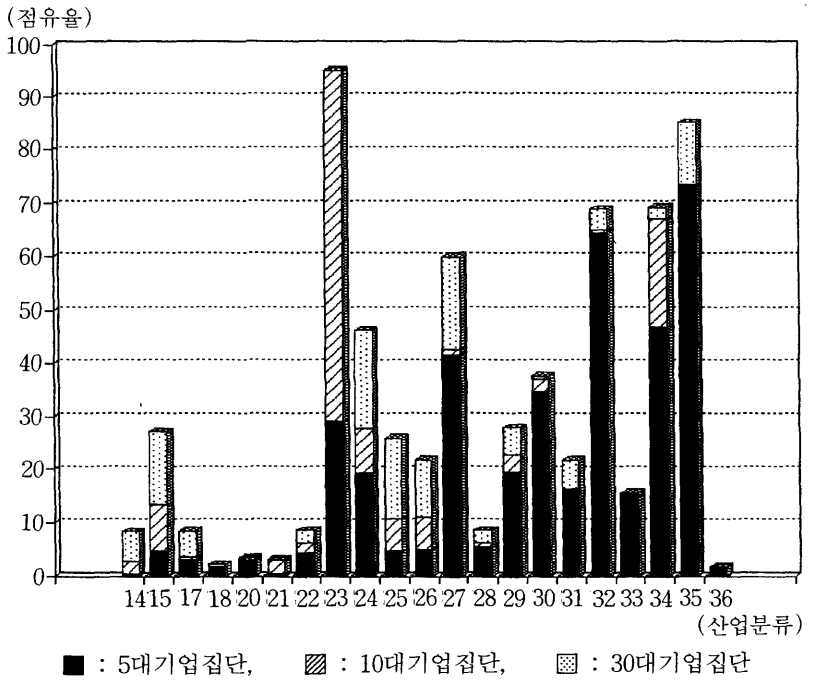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집단의 평균적인 규모격차가 나타나 있다. 전산업을 기준으로 볼 때, 1982~95년간 30대기업집단 중 상위 5대기업집단의 비중은 약 10%포인트 높아졌으며, 상위 5대기업집단과 하위 5대기업집단간의 평균격차도 16배에서 32.8배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광공업부문에 국한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977년의 경우 상위 5대기업집단과 하위 5대기업집단간의 격차는 약 7배 정도였으나, 1994년에는 약 19배로 확대되었다.

3. 産業構造와 企業集團

30대기업집단의 산업활동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별 기업집단의 비중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에는 광공업부문의 30

[그림 2] 鑛工業部門 中分類産業別 30大企業集團의 比重



註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산업 번호별 산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14 기타광업, 15 음식료품, 17 섬유제품, 18 의복 및 모피, 20 목재 및 나무제품,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6 비금속 광물제품,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외), 29 기계 및 장비제조업 N. E. C,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3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기타 운송장비, 36 가구 및 기타제조업

대기업집단의 산업중분류별 비중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30대기업집단은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23), 화합물 및 화학제품(24), 제1차금속(2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2), 자동차 및 트레일러(34), 기타운송장비(35) 등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시장규모가 클 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이다.

또 한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이 영위업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5대기업집단의 경우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 산업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최근의 우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활력을 보이며 성장해 온 산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그 외의 기업집단들은 음식료품, 석유, 화학, 비금속광물제품 등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비교적 침체되어 있는 장치산업 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기업집단의 성장이 빨랐던 것은 이러한 성장산업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여하튼 상위기업집단이 대거 진출한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등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산업계에 있어서도 큰 활력을 보이고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산업에서는 기술진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규모도 상대적으로 거대하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본 및 기술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시장을 상대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생존해 나가기 어렵다. 이들 산업에서의 하위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대규모의 자본과 고도의 기술개발력이 필요한 부문이라는 산업상의 특징에서 기인된 면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광공업부문은 모두 603개의 세세분류산업으로 분류된다.[11] 이들 산업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표 4〉에서 보듯이 출하액기준으로 산업규모가 1조원 미만인 산업이 54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1조원 이상인 산업은 63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산업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규모산업이 광공업 전체 출하액의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업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기업집단의 진출이 두드러져, 산업규모가 2조원 이상인 26개 산업 가운데 25개 산업에

11) 1994년 현재 1개 이상의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이다.

〈표 4〉 産業規模와 企業集團(1994)

(단위 : 개, 10억원, %)

산업규모	산업수			출하액		
	총산업수	5대집단참여	30대집단참여	산업총출하	5대집단점유율	30대집단점유율
1,000억원 미만	249	2	20	8,969(3.0)	0.7	5.4
1,000억~5,000억원	227	22	77	55,679(18.7)	3.6	10.9
5,000억~1조원	64	25	45	46,492(15.6)	10.4	21.6
1조~2조원	37	19	31	49,241(16.5)	15.6	29.0
2조원 이상	26	23	25	137,463(46.2)	42.7	63.3

註 : 1) ( ) 안의 숫자는 제조업 총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산업수는 세세분류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기준임.

30대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에서 30대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63.3%에 이르고 있다. 반면 출하액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산업에서는 총 249개 산업 중 30대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 20개에 불과하며 출하액 비중도 5.4%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을 요약하면, 상위기업집단일수록 ① 규모가 큰 산업, ② 성장산업에 많이 진출해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기업집단 역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Ⅲ. 企業集團의 市場地位·多邊化·所有構造

1. 企業集團과 一般集中

일반집중이란 한나라의 경제에서 소수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집단과

같은 기업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제전체의 집중도를 계측할 때는 일반집중도를 채택하나, 소유집중, 집단적 경영체계 등과 같은 특수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의 일반집중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와 달리 그다지 심각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대규모 합병붐이 나타났을 때, 소수기업으로의 힘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클레이턴법 7조의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저해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예에서 보듯이 이 자체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계 주요국가의 100대기업을 기준으로 한 일반집중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1994년, 광공업의 38.7%) 일본(1980년, 제조업의 26.0%)에 비해 높지만, 미국(1980년, 제조업의 48.0%)이나 서구국가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일반집중도의 차이는 각 나라의 산업구조의 차이, 국가경제규모의 차이 등에서 오는 측면이 크므로 직접 비교하는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서구국가들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일반집중이 높은 것은 산업발전의 역사와 기업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면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12]

우리나라 광공업부문의 일반집중의 현황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광공업부문의 상위 100대기업은 1994년의 경우 출하액 기준으로는 38.7%, 고용기준으로는 17.6%를 차지하고 있다. 100대기업의 구성을 보면 독립기업은 1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83개의 기업이

12) 우리나라나 일본기업의 경우 산업발전의 역사가 구미에 비해 훨씬 짧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단기간에 생산의 전부분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기술·자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원자재생산에서 완제품생산에 이르는 수직적인 생산의 여러 과정에 계열화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수직적 분업체계를 이루게 된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및 일본의 기업들은 서구기업에 비해 내제율이 낮아 동일한 규모의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직접 비교한다면, 서구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나 일본의 일반집중도가 낮은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표 5〉 鑛工業部門의 一般集中과 企業集團(1994)

기업구분	출하점유율(%)	고용점유율(%)	30대집단계열기업수
상위50대기업	31.8	13.8	49개
상위100대기업	38.7	17.6	83개

30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이다. 상위 50대기업의 경우 1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30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일반집중이란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다른 한 측면인 것인다.

일반집중도는 출하액이나 고용 등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7년에는 100대기업의 출하액점유율 및 고용점유율이 각각 44.9% 및 23.9% 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4년에는 각각 38.7%와 17.6%로 되었다. 이는 그동안 산업저변의 확대로 기업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체 기업수에서 10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데 따른 결과일 것이다.

2. 企業集團의 市場地位

기업집단과 독과점문제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산업에서 30대기업집단이 갖는 비중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은 개별 시장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광공업부문에서는 1994년 현재 모두 3,168개의 품목[13]이 출하되고 있는데, 이들 품목을 시장구조 유형별로 구분한다면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 3사점유율이 30% 미만인 경쟁형 시장은 전체의 7.5%

1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단위분류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장의 구분은 제조업의 경우 대개 품목분류에 따라 설정된다.

〈표 6〉 鑛工業部門의 品目別 市場構造(1994)

(단위 : 개)

시장구조구분	500억원미만 품 목	500억~1,000억원 품 목	1,000억~5,000억원 품 목	5,000억원이상 품 목	합 계
경쟁형	59 (2.7)	57 (15.6)	101 (20.2)	22 (20.2)	239 (7.5)
저위집중형	264 (12.0)	89 (24.4)	118 (23.6)	18 (16.5)	489 (15.4)
중위집중형	391 (17.8)	73 (20.0)	103 (20.6)	15 (13.8)	582 (18.4)
고위집중형	1,198 (54.6)	139 (38.1)	173 (34.5)	52 (47.7)	1,562 (49.3)
완전독점형	281 (12.8)	7 (1.9)	6 (1.2)	2 (1.8)	296 (9.4)
계	2,193(100.0)	365(100.0)	501(100.0)	109(100.0)	3,618(100.0)

註 : ( ) 안의 숫자는 품목수 비중(%)이며, 시장구조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 경쟁형: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인 시장
- 저위집중형: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시장
- 중위집중형: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70% 미만인 시장
- 고위집중형: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되, 완전독점형을 제외
- 완전독점형: 1사의 시장점유율이 100%인 시장

에 불과한 239개에 지나지 않는 반면, 58.7%에 해당하는 품목이 상위 3사점유율 75% 이상인 고위집중형 및 완전독점형시장에 속해 있으며, 특히 완전독점형 시장도 296개나 된다.

품목을 시장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시장규모가 작은 품목일수록 집중도가 높은 품목이 많고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집중도가 낮은 품목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시장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품목의 경우 경쟁형 시장의 비중은 2.7%에 불과하며, 고위집중형 내지는 완전독점형 시장이 67.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시장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품목에서는 그 비중이 각각 20.2%와 49.5%로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출하액 500억~5,000억원의 중규모 시장이 대규모 시장에 비해 오히려 집중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시장에서 다수의 기업집단이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데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7〉 品目市場에서의 30大企業集團의 市場占有率(1994)

(단위 : 개)

30대집단시장 점유율 합계	500억원미만 품 목	500억~1,000억원 품 목	1,000억~5,000억원 품 목	5,000억원이상 품 목	합 계
10% 미만	51 (2.3) (0.5)	39 (10.7) (1.0)	85 (17.0) (6.6)	13 (11.9) (4.6)	188 (5.9) (12.8)
10~30%	56 (2.6) (0.5)	31 (8.5) (0.8)	72 (14.4) (6.1)	14 (12.8) (6.4)	173 (5.5) (13.9)
30~50%	42 (1.9) (0.3)	23 (6.3) (0.6)	55 (11.0) (4.4)	13 (11.9) (3.5)	133 (4.2) (8.9)
50~70%	38 (1.7) (0.3)	25 (6.8) (0.6)	45 (9.0) (3.6)	8 (7.3) (2.1)	116 (3.7) (6.6)
70% 이상	101 (4.6) (0.7)	41 (11.2) (1.0)	97 (19.4) (7.8)	47 (43.1) (22.7)	286 (9.0) (32.1)
소 계	288 (13.1) (2.3)	159 (43.6) (4.0)	354 (70.7) (28.5)	95 (87.2) (39.3)	896 (28.3) (74.3)
비참여품목	1,905 (86.9) (7.4)	206 (56.4) (5.1)	147 (29.3) (8.8)	14 (12.8) (4.4)	2,272 (71.7) (25.8)
합 계	2,193(100.0) (9.7)	365(100.0) (9.2)	501(100.0) (37.4)	109(100.0) (43.8)	3,168(100.0) (100.0)
평균참여집단수	1.2	1.5	2.1	3.2	1.8

註 : ( ) 안의 숫자 중 상단은 당해 품목의 품목수 비중이며, 하단은 광공업부문 품목 총출하액(283.6조원) 중에서 당해 품목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표 7〉에는 시장규모별 30대기업집단의 참여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30대집단은 시장규모가 큰 품목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하액 500억원 미만의 품목의 경우에는 총 2,193개 품목 중 13.1%에 해당하는 288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5,000억원 이상인 품목의 경우 87.2%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출하액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시장에서 기업집단의 점유율이 높은 품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규모가 큰 품목일수록 다수의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500억원 미만의 품목

〈표 8〉 市場規模別 企業集團의 市場地位

(단위 : 개)

기업집단계열 기업시장지위	500억원미만 품 목	500억~1,000억원 품 목	1,000억~5,000억원 품 목	5,000억원이상 품 목	합 계
1, 2, 3위	4 (1.4)	6 (3.8)	36 (10.2)	35 (36.8)	81 (9.0)
1, 2위	19 (6.6)	17 (10.7)	60 (16.9)	13 (13.7)	109 (12.2)
1위	161 (55.9)	67 (42.1)	122 (34.5)	25 (26.3)	375 (41.9)
2위 또는 3위	57 (19.8)	36 (22.6)	72 (20.3)	11 (11.6)	176 (19.6)
3위 밖	47 (16.3)	33 (20.8)	64 (18.1)	11 (11.6)	155 (17.3)
합 계	288(100.0)	159(100.0)	354(100.0)	95(100.0)	896(100. 0)

중 30대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는 시장당 평균 1.2개의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으나, 출하액 5,000억원 이상인 시장에는 시장당 평균 3.2개의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표 8〉은 품목시장에서의 기업집단 계열기업의 시장지위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광공업부문의 3,168개 품목 중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품목은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896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565개 이상에서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시장점유율 1, 2, 3위가 모두 30대 기업집단 계열기업에 해당하는 품목시장도 81개(9.0%)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시장의 경우 이 비율은 36.8%에 이르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은 품목은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1위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품목의 경우에는 고위집중형 시장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 시장규모가 큰 품목의 경우에는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다수 참여하여 이들이 시장에서 상위순위를 공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규모가 작은 품목에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하나의 기업집단이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시장 규모가 큰 품목의 경우는 다수의 기업집단이 동일시장에 참여하여 이들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3. 企業集團의 多邊化

우리나라 상위기업집단이 가진 특징 중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많은 산업에 걸쳐 다변화(diversification)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일반의 전반적인 인식은 다변화에 대해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데 반해, 기업은 사업다각화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집단이 다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혹은 전문화를 추구할 것인가는 기업집단 스스로의 경영방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 대해 좋다, 나쁘다라는 일의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역사를 보더라도, 기존 영위업종에 온존하여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에 소극적이던 기업집단들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한 경우도 많으며, 반대로 기업능력을 벗어난 지나친 다변화로 인해 사라져 간 기업집단들도 적지 않다.

여기서는 다변화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30대기업집단의 다변화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표 9〉에서 보듯이 기업집단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수, 주력산업에 대한 특화도, 엔트로피(entropy) 다변화지수 등 3가지를 통해서 30대기업집단의 다변화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14]

14) 여기서 사용한 각종 다변화지수의 수식과 특성에 관해서는 [補論]에서 설명하였다.

〈표 9〉 企業集團의 多邊化(1994)

기업집단 계층	생산품목수 (평균)	주력산업 특화도[1]	엔트로피다변화지수[2]			(B)/(A) (%)
			총다변화 (A)	관련다변화 (B)	비관련다변화 (C)	
1~ 5	142	0.551	1.967	0.652	1.315	33.1
6~10	63	0.656	1.510	0.470	1.040	31.1
11~15	39	0.583	1.683	0.588	1.095	34.9
16~20	30	0.681	1.431	0.703	0.727	49.2
21~25	28	0.760	1.268	0.549	0.718	43.3
26~30	19	0.724	1.134	0.510	0.624	45.0

註 : 1) 산업중분류 기준으로 출하액이 가장 큰 산업의 비중임.
2) 비관련다변화는 중분류산업에 걸친 다변화이며, 관련다변화는 중분류산업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총다변화=관련다변화+비관련다변화)의 관계가 성립됨.

먼저 생산품목수를 보면, 상위 5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당 평균 142개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의 순위가 내려갈수록 생산품목수가 적어지고 있어 상위기업집단일수록 다변화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품목수를 기준으로 보면, 특히 상위 5대기업집단과 그 이하 기업집단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상위기업집단일수록 생산품목수가 많은 만큼, 주력산업에 대한 특화도는 상위 기업집단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 5대기업집단의 경우 주력산업에 대한 특화도는 약 55% 정도이나 하위로 내려갈수록 이 숫자는 커져 하위 5대기업집단의 경우 특화도는 약 72%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다변화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간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기로 한다. 〈표 10〉에는 1991~94년간 5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집단규모와 베리지수(H)로 표시된 다변화지수간의 단순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가 정리되어 있다.[15] 이 표를 보면, 기업집단의 다변화

〈표 10〉 企業集團 規模와 多邊化간의 相關關係(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변화 (베리지수)				
	1991~94	1991	1992	1993	1994
기업집단순위	0.518	0.573	0.591	0.496	0.467
기업집단 출하액	0.387	0.454	0.429	0.384	0.331

註 : 위 상관계수는 모두 99%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음.

와 규모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16] 특히 기업집단 출하액으로 표시된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이를 서열화한 기업집단 순위와 좀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 이후 기업집단규모와 다변화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추세적인 특성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현상에 불과한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엔트로피(entropy) 다변화지수를 이용하면, 기업집단의 다변화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 엔트로피 다변화지수에 의하더라도 상위기업집단의 다변화가 전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다변화지수는 상위 5대기업집단의 경우 1.97이며, 하위로 내려갈수록 점차 낮아져, 하위 5대기업집단의 경우 1.3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17] 그런데 이를 관련산업 다변화와 비관련다변화로

15) 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서 다변화의 척도로서 베리지수를 선택한 것은 〈표 9〉에서 사용한 주산업특화도가 다변화의 구체적인 수준을 파악하기에 불충분하며, 엔트로피지수 역시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 베리지수는 지수치 자체로부터 직감적으로 다변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으나, 다변화의 폭과 다변화된 생산품목의 규모분포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베리지수의 수식과 특성에 대해서는 [補論]을 참고하기 바란다.

16) 상관계수가 갖는 본래적 특성상 계수치가 양변수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가는 말해 주지 못한다. 즉 지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상관관계가 높고,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상관관계가 낮은지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7) 엔트로피 다변화지수에 있어서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며, 단지 비교치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나누어 보면[18]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관련다변화는 기업집단순위에 따른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비하여, 비관련다변화는 상위기업집단일수록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다변화에서 관련다변화의 비율이 하위기업집단으로 내려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상위기업집단일수록 보다 넓은 산업범위에 걸쳐서 다변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 企業集團의 所有構造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소유주 및 그 가족과 계열기업간 복잡한 자본연결관계로 기업소유의 집중이 높은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사라져 버린 경제력집중이란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아마 이 기업집단 계열기업의 소유집중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기업집단 계열기업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관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 억제대책도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한도의 제한 등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상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1987년부터 매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정기준은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1993년부터 총자산기준으로 상위 30대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18) 비관련다변화는 이종산업간에 걸친 다변화를, 관련다변화는 동종산업내에서 이루어진 다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중분류산업간에 걸친 다변화를 비관련다변화, 동일한 중분류산업내에서 이루어진 다변화를 관련다변화로 정의하였다.

〈표 11〉 企業集團의 所有構造[1]

(단위 : 억원, %)

	가족소유분[3]	계열회사	내부지분율
83[2]	17.2	40.0	57.2
87	14.7	32.5	46.2
89	14.8	30.0	44.8
90	14.3	31.3	45.7
91	14.1	32.9	47.0
92	12.6	33.5	46.0
93	10.3	33.1	43.4
94	9.7	33.1	42.7
95	10.5	32.8	43.3
96	10.3	33.8	44.1

註 : 1)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함.
2)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세청 법인세 자료에 의해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한 3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수치임.
3)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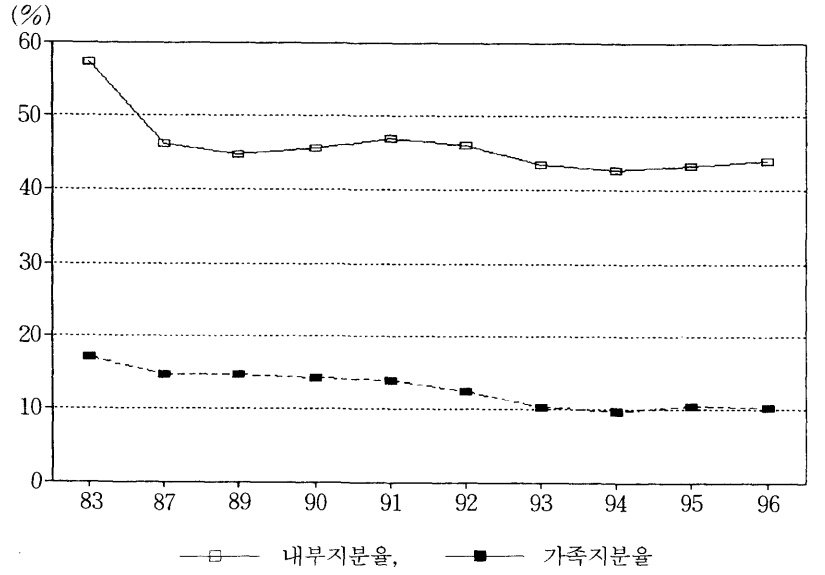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30개로 한정된 1993년 이후 계열기업수는 상당한 정도로 늘어났다.

〈표 11〉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나타나 있으며,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3]에서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최근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부지분은 크게 가족지분과 계열회사지분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가족지분이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이 확대되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내부지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부지분율의 현저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기존기업의 소유집중은 완화되더라도 새로운 기업의 설립 및 비공개기업의 증자시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내부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그림 3] 企業集團 內部持分率의 變化推移



지분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경제의 성장에 따른 기업규모의 확대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족이라는 개인의 출자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가족소유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기업집단의 소유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일반인 및 기관투자가 등 외부자들의 주식소유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집단 계열기업의 공개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집단의 계열기업공개현황을 보면, 1994년 현재 5대집단의 경우 기업수로는 27.1%, 자본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보다 월등히 높은 62.5%가 공개되었으며, 30대집단 전체를 보더라도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추세상으로 볼 때 공개기업수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자본금의 비중은 상당한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신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비공개기업이므로 공개기업수가 계열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지만, 공개기업의 경우 우선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자본금

〈표 12〉 企業集團 系列企業 公開現況

(단위 : 개, 억원)

	5대집단				30대집단			
	기업수기준		자본금기준		기업수기준		자본금기준	
	수	공개율(%)	금액	공개율(%)	수	공개율(%)	금액	공개율(%)
89	187	29.9	6,907	56.6	514	27.0	11,226	56.3
91					561	28.7	-	-
92	208	26.4	11,022	49.9	604	27.7	20,131	56.9
93	208	26.4	12,225	53.2	616	26.6	22,232	56.8
94	207	27.1	13,203	62.5	623	27.6	24,439	63.1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규모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공개가 소유집중이라는 정책과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Ⅳ. 企業集團의 規模·成果·市場地位·多邊化간의 關係에 관한 實證分析

1. 分析方法과 變數

앞의 Ⅱ장과 Ⅲ장에서는 횡단면적인 표를 이용하여 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징, 그리고 기업집단의 시장력[19]과 다변화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30대기

19) 기업집단의 시장지위 혹은 시장점유율이라는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업집단이 상당한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집단일수록 다변화의 정도가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시장력·다변화 등 시장활동과 관련된 변수와 자본장비율, 기업규모, 노동의 질 등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변수가 기업집단의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이 분석에서는 최소자승법에(OLS) 의한 다중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채택하기로 한다. 함수의 형태를 선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탄성치 불변을 전제로 하는 트랜스로그 함수(translog function) 등 비선형함수를 채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이 기업집단규모 및 성과, 시장구조, 생산구조간의 구체적인 함수관계가 아니라, 이들간에 존재할 수 있는 단순한 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선험적으로 이들 변수간에 어떠한 함수형태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선형함수를 채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분석에서는 1991~94년간의 상위 50대기업집단과 상위 200대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20] 기업집단 단위와 기업 단위로 각각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기업집단 단위의 분석과 별도로 기업 단위의 분석을 행한 것은 기업집단의 성과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기업의 성과의 합이며, 또 기업의 성과나 생산구조, 시장력 등은 사실상 개별기업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두가지 시도가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단위의 분석에 있어서는 30대기업집단 계열기업에 대해 더미(dummy)변수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으나, 이들 대기업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0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이며, 또 30위 이내의 기업집

20) 상위 200대기업 중 자료가 불완전한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실제 분석에 이용된 숫자는 1991년 198개, 1992년 198개, 1993년 150개, 1994년 157개가 된다.

단과 여타 기업집단간 기업경영을 특징짓는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채택하지 않았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각 변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업집단 수준에서 계산된 수치이며,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업 수준에서 계산된 수치가 된다.

[종속변수: 성과지표]

$ES1 = S/E$: 종업원 1인당 출하액

$ES2 = S/PAY$: 임금단위당 출하액(PAY : 급여액)

[설명변수: 규모, 생산구조, 시장력 및 다변화 지표]

KL = (유형고정자산−토지)/종업원수 : 유형고정자산 가운데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종업원수로 나눈 것으로, 종업원 1인당 순수한 노동장비율을 나타낸다.

$PPAY$ = 종업원 1인당 급여로서, 노동의 질적 수준을 표시하는 대리변수로 채택하였다.[21]

$SCALE$ = 기업집단의 총출하액(단위는 천억원)으로서 기업집단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채택하였다.

$$GSHR = \sum_{i=1}^{n} w_i \cdot SR_{ik}$$

21) 급여가 노동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인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독점적 기업에 의해 얻어진 독점이윤이 노동에도 분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경험적으로 볼 때, 독과점적인 대기업이 우수인력을 선점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개개인의 자질과 무관하게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요인이 복합되어 결과적으로는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요인을 합쳐 '노동의 질'이라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 측면은, 급여를 제외한다면 노동의 질을 측정할 보편성을 가진 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1인당 급여를 노동의 질의 대리변수로 채택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w_i=(기업집단의 i품목 매출액)/(기업집단 총매출액)

SR_{ik}=기업집단 k의 i시장에 있어서의 시장점유율

: 기업집단의 품목시장점유율의 가중평균치로서, 가중치는 특정 기업집단의 총출하액 중 당해 시장 출하액의 비중이다. 특정 기업집단의 시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채택하였다.

$$Hf = \sum_{i=1}^{n}\sum_{j=1}^{m} w_i \cdot (SR_{ij}^2 - SR_{ik}^2)$$

SR_{ij} : i시장에서의 j기업의 시장점유율

: 특정 기업집단이 참여한 시장의 허핀달지수[22][23]에서 당해 기업집단의 기여치를 제거한 것으로, 당해 기업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DIV = 1 - \sum_{j=1}^{n} w_i^2$$

: 베리(Berry)지수로 표시된 기업집단의 다변화지표이다.

기업의 성과지표로는 출하액과 함께 부가가치도 자주 사용된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출하액을 채택한 것은 다음과 같

22)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허핀달지수(Herfindahl index)의 가중평균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 = \sum_{i=1}^{n}\sum_{j=1}^{m} w_i \cdot SR_{ij}^2$$

단, w_i=(기업집단의 i품목 매출액)/(기업집단 총매출액)

23) 시장구조지수로서의 허핀달지수의 장점에 관해서는 李奎億(1976), 李奎億·李在亨·金周勳(1984), 崔載哲·李在亨(1988)을 참고하기 바란다. 허핀달지수가 상위 k사 집중률보다 우월한 집중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단지 자료의 제약 때문이다.

24) 기업성과지표로서는 이전에는 Bain(1951, 1956) 등이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세전이익 혹은 세후이익 등의 지표를 사용했으나, 재무관련자료가 성과지표로서 갖는 한계로 인하여 Collins and Preston(1968, 1969)이 가격-비용 마진(PCM)을 성과지표로 채택한 이래 PCM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과지표로 자리를 잡았다. Collins and Preston은 PCM을 [매출액－변동비용－자본비용(기회비용+감가상각비)]으로 계산했으나 일반적으로 자본비용을 무시하고 [매출액－변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광공업통계에서의 부가가치와 거의 일치하는 개념이다(Schmalensee and Willig[1989]에서 인용).

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부가가치도 일종의 규모변수로서 출하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어느 쪽을 택하든 실증분석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둘째 부가가치는 급여, 이윤, 감가상각비, 기타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급여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변수로 사용된 *PPAY*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명변수로는 먼저 시장구조변수로서 기업집단의 특정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GSHR*)과 기업집단을 제외한 상태의 시장구조(*Hf*)를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기업집단이 참여한 시장의 허핀달지수로 표시된 시장구조(*H*)와 각 시장에 있어서의 허핀달지수에 대한 기업집단의 기여치(*Hg*) 등을 고려하였으나, *GSHR*은 *H* 및 *Hg*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는 채택하지 않았다. *Hg*는 $(GSHR)^2$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당연하며, *GSHR*과 *H*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업집단의 시장지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것이다.[25]

다변화변수로서는 품목시장을 기본단위로 한 베리지수(Berry index)[26]로 표시된 다변화도(*DIV*)를 채택하였다. 베리지수를 선택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주산업특화도나 참여품목수 등은 기업집단의 다변화의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엔트로피 다변화지수의 경우는 지수치가 갖는 의미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25) 崔載哲·李在亨(1988)에서는 1985년의 제조업부문 시장집중지수를 이용하여 허핀달지수(*H*)와 CR_k(상위 *k*사 시장점유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H*와 CR_1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는 고집중형이 많고, 또 기업집단은 Ⅲ장에서 보았듯이 높은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GSHR*과 *H*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6) [補論] 참조.

〈표 13〉 說明變數間 相關關係(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CALE	*KL*	*PPAY*	*GSHR*	*Hf*	*DIV*
SCALE	1.000	0.081	0.250	0.241	0.058	0.387
KL		1.000	0.410	0.168	0.050	0.165
PPAY			1.000	-0.077	0.251	0.234
GSHR				1.000	-0.189	-0.008
Hf					1.000	0.088
DIV						1.000

이 모형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1~94년간의 50대기업집단에 관한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3 참조). 이 결과를 보면, *KL*과 *PPAY* 그리고 *SCALE*과 *DIV*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상관관계가 몇 개 변수를 제거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는 판단하기 어렵고, 또 이 분석의 주안점이 특정의 함수식을 도출하기보다는 계수(coefficient)의 부호와 그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이들 변수를 모형에는 일단 모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음에 설명할 분석결과에서 설명력(R^2)이 과대평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시장구조지수 및 다변화지수의 계산은 품목분류(표준산업분류상의 8단위 분류)를 기본단위로 하였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의 구분이 표준산업분류상의 품목분류와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구조지수가 경쟁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품목시장을 기준으로 시장구조지수와 다변화지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成果와 生産構造·市場力·多邊化간의 關係

"기업의 시장력과 다변화가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산업조직이론에서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연구되어 온 과제였다.

시장력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시경제이론에서 경쟁시장에 비해 독점시장이 기업성과에는 플러스효과를 가져오지만, 배분적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이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완전독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따라서 많은 시장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점적 시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의 차이와 그로부터 기인된 기업의 시장력이 기업성과에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열거하기도 어려운 많은 실증적 연구가 행해져 왔다. 산업조직론의 실증적 연구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러한 시장구조-행동-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력과 성과간에는 正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결론이었다.[27]

이에 비해 다변화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범위의 경제' 개념, 위험분산 등 여러 측면에서 설명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드물었다. 다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던 가장 큰 원인은 구체적인 기업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자료 제약상의 문제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위 '재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중 많은 부분도 이 다변화의 효과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시도한 바

27) Weiss(1974)는 1970년대 초반에 발표된 46개의 구조-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를 검토한 결과 그중 40개에서 구조와 성과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정리하였다(Schmalensee and Willig[1989]에서 인용).

있던 업종전문화시책 등이 다변화에 대한 부정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기업측에서는 다변화가 갖는 긍정적 효과를 들어 다변화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 주장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는 찾기 어려우며, 논리적 개연성이나 단편적인 일화를 통해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할 뿐이다.

다변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다변화가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두번째는 다변화가 배분적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이다. 시장지배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배분적 효율성의 저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적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다변화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성과와 배분적 효율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판단이 어렵다. 여기서는 다변화의 두가지 효과 중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선 생산구조상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변수로는 종업원 1인당 장비율(KL), 노동자의 질($PPAY$), 기업규모($SCALE$)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시장력과 다변화의 정도를 보여 주는 변수로서 앞에서 설명한 $GSHR$, Hf와 DIV를 사용하였다. 이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4〉와 〈표 15〉에 요약되어 있다(표 14와 표 15는 각각 기업집단과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면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먼저 어떤 기준에서 어떤 성과변수를 종속변수로 채택하든간에 노동장비율(KL)이 기업(집단)의 성과와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을 가진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한편, 종업원 1인당 급여($PPAY$)는 1인당 매출액으로 표시된 성과지표($ES1$)와는 전체연도에 걸쳐 正의 관계를 가지며, 그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동의 질에 상응하는 급여를 반영한 성과지표, 즉 임금단위당 매출액($ES2$)

〈표 14〉 企業集團 成果의 決定要因

종속변수	*ES*1	*ES*2	*ES*1	*ES*2	*ES*1	*ES*1	*ES*1
연도	91～94	91～94	94	94	93	92	91
표본수	200	200	50	50	50	50	50
상수항	48.391	15.191***	107.783	18.076**	198.267*	−36.561	20.733
	(0.975)	(4.306)	(0.725)	(2.070)	(1.700)	(−0.359)	(0.216)
KL	0.526***	0.036***	0.473***	0.028***	0.504***	0.645***	0.531***
	(8.163)	(7.940)	(3.752)	(3.757)	(3.797)	(4.368)	(3.607)
PPAY	10.472***	−0.141	10.463**	−0.165	7.481	(9.592)*	10.004*
	(5.160)	(−0.976)	(2.382)	(−0.638)	(1.267)	(1.960)	(1.832)
SCALE	0.290*	0.021*	0.180	0.011	0.551	0.109	0.320
	(1.706)	(1.714)	(0.574)	(0.591)	(1.464)	(0.288)	(0.809)
GSHR	−16.519	−0.802	66.689	5.649	−36.780	−4.045	−36.496
	(−0.430)	(−0.294)	(0.602)	(0.867)	(−0.442)	(−0.052)	(−0.534)
Hf	−23.290	−1.638	54.025	5.279	−49.593	−171.048	−135.489
	(−0.293)	(−0.290)	(0.368)	(0.611)	(−0.259)	(−0.968)	(−0.699)
DIV	−57.220	−3.356	−154.210	−8.362	−177.892*	68.953	3.607
	(−1.117)	(−0.921)	(−1.064)	(−0.982)	(−1.677)	(0.685)	(0.036)
R^2	0.473	0.281	0.446	0.291	0.388	0.500	0.440

註 : ( ) 안의 숫자는 *t*값임.

***, **, *는 각각 99%, 95%, 90%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을 표시함.

〈표 15〉 企業成果의 決定要因

종속변수	*ES*1	*ES*2	*ES*1	*ES*2	*ES*1	*ES*1	*ES*1
연도	91~94	94	94	94	93	92	91
표본수	703	703	157	157	150	198	198
상수항	−58.401	13.400***	−157.351	9.215	−77.070	−115.169	−0.774
	(−1.266)	(4.926)	(−1.098)	(1.325)	(−0.622)	(−1.238)	(−0.011)
KL	0.620***	0.031***	0.756***	0.040***	0.704***	0.590***	1.148***
	(25.339)	(21.567)	(6.988)	(7.655)	(5.263)	(20.758)	(8.106)
PPAY	13.261***	−0.209	12.774***	−0.206	13.604**	18.850***	7.164
	(5.734)	(−1.532)	(2.481)	(−0.824)	(2.209)	(3.408)	(1.522)
SCALE	5.269***	0.346***	3.778**	0.197**	6.673	7.460***	5.422***
	(5.802)	(6.041)	(2.145)	(2.303)	(3.212)	(3.216)	(2.953)
GSHR	−39.686	−1.069	21.189	0.450	−62.604	−96.790	−43.292
	(−0.732)	(−0.334)	(0.141)	(0.062)	(−0.468)	(−0.956)	(−0.576)
Hf	154.657	10.019	118.919	8.468	245.190	172.117	158.194
	(1.456)	(1.599)	(0.532)	(0.781)	(0.989)	(0.753)	(0.939)
DIV	12.633	0.227	88.625	2.673	−12.450	29.275	−8.956
	(0.323)	(0.099)	(0.734)	(0.456)	(−0.136)	(0.384)	(−0.170)
R^2	0.551	0.432	0.360	0.325	0.301	0.734	0.417

註 : ( ) 안의 숫자는 *t*값임.

***, **, *는 각각 99%, 95%, 90%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을 표시함.

과는 부의 관계를 가지나, 그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이나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 어느 쪽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규모(*SCALE*)와 성과간에는 흥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규모는 일관되게 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과지표를 어느 것으로 택하든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이는 기업집단의 규모는 기업집단의 성과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규모는 기업집단의 성과와는 正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집단정책의 방향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집단)의 시장력(*GSHR*) 및 비계열기업의 시장에서의 규모분포(*Hf*), 기업집단의 다변화(*DIV*) 등은 전반적으로 기업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SHR*은 기업집단 대상이나 개별기업 대상 모델에서 모두 1994년을 제외하고는 성과와 負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 *Hf*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대체로 성과와 부의 관계를 보이며,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정의 관계를 갖지만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화(*DIV*)는 연도에 따라 정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변화가 심한데,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계수(R^2)를 보면 전반적으로 횡단면분석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회귀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KL*과 *PPAY*간에 약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R^2가 과대

평가된 면이 적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모델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이든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성과는 '많은 부분이' 노동장비율을 비롯한 생산구조변수에 의해 설명되며, 시장력 및 다변화 등의 변수는 성과와 거의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28]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① 기업(집단)의 성과는 많은 부분이 노동장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② 노동의 질도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노동의 질에 상응하는 비용을 상쇄한다면,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 어렵다. ③ 기업집단의 규모는 기업집단의 성과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④ '이 모형에 의하면' 기업(집단)의 시장력,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기업의 분포 및 다변화는 성과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위의 결론 ①, ②, ③은 일반적 결과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④는 단지 이 논문에서 채택한 모형과 변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29] 따라

28) 이들 세 변수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설명력 역시 낮을 것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들 세 변수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R^2는 모두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29) 이 모델에서 사용된 성과지표는 결국 종업원당 혹은 임금단위당으로 표시된 생산성지표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기업성과=경제적 의미의 이윤'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기업이 시장력 혹은 다변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경쟁적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비해 '어느 정도' 더 높은 초과이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기업의 출하액 혹은 부가가치와 비교할 때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분석에서 사용된 성과지표로서의 출하액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부가가치, PCM 등의 성과지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력 혹은 다변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나타낼 변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기업이윤과 함께 제세공과금, 임금·일반관리비 등에 스며들어 있는 '利潤性' 비용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보다 풍부한

서 이 단계에서 결론 ④는 '제한적' 결론으로 남겨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Ⅳ. 要約 및 結語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현황과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30대 기업집단은 우리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의 비중은 산업 전반의 구조변화와 아울러 기업수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경제력집중 문제를 산업에서 차지하는 기업집단의 절대적 비중문제로 축소시킨다면, 그 해소는 산업저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 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는 점차 최상위 수개 기업집단의 문제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3) 기업집단들은 특히 규모가 큰 산업에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위기업집단의 경우 성장이 빠른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의 참여가 많은 것이 특징적이며, 중·하위 기업집단의 경우 시장규모는 크지만 비교적 안정기에 들어선 산업에 주로 진출해 있다.

(4)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거의가 30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으로

자료 및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서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집중은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또 다른 단면이다.

(5) 개별 상품시장에서 30대기업집단은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기업집단들이 상위지위를 다투며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6) 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 및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상위기업집단은 하위기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관련다변화의 비중이 높다.

(7)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기업 효율성 혹은 성과라는 측면에서 다변화 등의 효과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8)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의 규모는 성과와 밀접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정책방향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9)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절대적 숫자로는 높은 편이지만, 근소하나마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족소유지분의 비율하락이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10)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앞의 결론 (8)과 연결한다면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록 제한된 자료를 이용했으나마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다변화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기업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타 산업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경제력집중 문제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집단의 실상과 특징,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적 입안과 집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되고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기에는 여러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광공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현황과 특징 및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또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필자 스스로 기업집단의 현황을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광공업부문만이 아닌 산업 전부문에 걸친 기업집단의 비중과 사업활동상의 특징,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구체적인 자본적 연결구조와 특징, 기업집단 계열기업간 인적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과 생산물의 연결 및 의존구조, 공정거래법, 회사법 등 법·제도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미친 영향,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경영구조의 특징 등 여러 측면이 아직도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경제력집중 및 대기업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서로의 논거를 확인할 경험적 증거를 갖지 못한 채 일방적인 입장의 표명만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집단에 대한 막연한 선입관에 근거한 인식의 차

이를 좁히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점에서 기초자료의 정비와 충실화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姜明憲, 『財閥과 韓國經濟』, 나남출판, 1996. 5.

公正去來委員會, 「大規模企業集團 株式所有現況」, 각년도.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關聯 法規集」.

司空壹, 「經濟成長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 제2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80.

劉承旻, 「企業集團, 中小企業, 政府: 產業·企業政策의 課題」, 한국개발연구원 내부자료, 1995.

劉承旻·李仁燦, 「韓國製造業의 技術的 效率性: 產業別 技術的 效率性의 測定」, 『韓國開發研究』, 제12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90.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한국개발연구원, 1976

李奎億·李成舜,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연구보고서 85-02, 한국개발연구원, 1985.

李奎億·李在亨, 『企業集團과 經濟力集中』, 연구보고서 90-04, 한국개발연구원, 1990.

李奎億·李在亨·金周勳, 『市場과 市場構造: 우리나라의 製造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84-06, 한국개발연구원, 1984.

李在亨·劉承旻, 「大事業體와 財閥事業體의 成長과 生產性」, 『韓國開發研究』, 제16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1994.

崔載哲·李在亨, 「市場構造指數의 選擇과 政策的 應用」, 『韓國開發

研究』, 제10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1988.

森川英正, 『日本財閥史』, 教育社歷史新書 〈日本史〉 123, 教育社, 1978.

Cowling, K. and M. Waterson, "Price-Cost Margins and Market Structure," *Economica,* August 1976.

Schmalensee, R. and R.D. Willig, *Hand 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North-Holland, 1989.

Jacquemin, A. P. and C. H. Berry, "Entropy Measure of Diversification and Corporate Growth," *Journal of Industrial Ecnomics,* June 1979.

Weinstork, D.S., "Using the Herfindahl Index to Measure Concentration," *Antitrust Bulletin,* Summer 1982.

[補論] 多邊化指數의 特性

1. 出荷商品數 또는 參與産業數

기업집단이 생산하고 있는 상품수로서 다변화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품목이 기업집단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하는 결점을 갖지만 다변화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을 갖는다.

2. 主力産業特化度(ISR: Industry Specialization Ratio)

이 지수는 기업집단 총출하액 중 중분류산업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의미한다. 앞의 지수와 달리 다변화의 범위를 알 수 없으며 또한 각 시장별 기업활동의 분포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주력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잘 반영한다.

3. 엔트로피(Entropy) 多邊化指數

엔트로피지수는 시장집중지수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다변화지수로도 이용된다. n개의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엔트로피다변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 = \sum_{i=1}^{n} S_i \log S_i$$

단 S_i는 해당기업의 출하액 중 i산업의 비율

엔트로피지수는 여러가지 장점과 결함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다

변화의 속성을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즉 특정 기업집단의 다변화는 관련산업 내에서의 다변화와 이종산업간에 걸친 다변화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엔트로피지수를 이용하여 이를 분해할 수 있다.

특정 기업집단의 출하액 중 i산업의 출하액 비중을 S_i라 하고, i산업내에서 좀더 세분된 j산업 출하액이 총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S_{ij}, 그리고 j산업출하액이 i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S_j라 할 때 그 집단의 총 엔트로피다변화지수(ET)와 관련산업다변화 엔트로피(ER), 이종산업다변화 엔트로피(EB)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ET = EB + ER$$

$$ET = \sum_{i=1}^{n}\sum_{j=1}^{m} S_{ij} \log S_{ij}$$

$$EB = \sum_{i=1}^{n} S_i \log S_i$$

$$ER = \sum_{j=1}^{m} S_j \log S_j$$

(i=1,2,…… n : 중분류산업수

j=1,2,…… m : 특정 중분류산업 내에서의 세세분류산업수)

4. 베리(Berry)指數: 허핀달指數의 變形

이 지수는 시장구조의 측정에 이용되는 허핀달지수를 다변화지수로 이용한 것으로서, 각 집단의 총출하액 중 개별산업 i의 출하액의 점유율을 S_i라고 할 때

$$H = \sum_{i=1}^{n} S_i^2 \quad (n=\text{참여산업수})$$

로 정의된다. 이 지수는 참여산업간의 상대적 규모차이가 산업수보

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참여산업의 규모분포를 나타내는 이점을 갖는다. 이 지수는 규모분포가 균등할수록 그 값이 적어지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Berry(1971)는 지수치가 클수록 다변화 정도가 커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H^* = 1 - H$$

로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표 1〉 鑛工業部門의 構造變化

(단위 : 개, 천명, 10억원)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업원수			출하액		
	83	88	94	83	88	94	83	88	94
광공업	41,088	61,723	92,578	2,299	3,208	2,965	60,814	134,420	297,845
광업	2,066	1,991	1,206	94	96	35	1,445	2,384	1,678
제조업	39,022	59,732	91,372	2,205	3,111	2,929	59,369	132,035	296,166
15	4,422	4,648	5,858	173	214	200	6,477	11,375	23,425
16	22	22	16	13	9	5	1,601	2,152	3,210
17	5,129	7,499	9,838	357	415	304	5,739	12,041	17,959
18	3,532	5,912	8,460	223	283	203	2,193	4,798	8,632
19	1,382	2,538	3,085	169	228	96	1,800	5,409	5,465
20	1,707	1,948	2,505	42	43	41	852	1,318	2,903
21	1,421	1,895	2,600	53	69	68	1,645	3,813	7,488
22	1,499	2,499	4,366	47	72	92	946	1,912	5,650
23	57	76	76	5	7	10	6,355	5,761	13,141
24	2,003	1,824	2,644	12	126	154	5,795	11,582	27,510
25	1,876	3,419	5,416	71	122	137	1,760	4,929	11,093
26	2,839	3,339	4,567	100	123	135	2,548	5,259	12,953
27	1,096	1,560	1,921	94	122	117	5,732	11,892	24,793
28	2,652	3,968	8,790	110	148	186	1,955	4,645	13,792
29	3,101	6,069	11,582	136	238	293	2,854	9,282	24,227
30	198	193	599	15	17	30	272	1,028	3,673
31	982	2,029	4,043	65	110	125	1,411	4,159	9,765
32	900	2,652	3,434	137	321	264	3,525	14,077	32,503
33	473	942	1,801	27	52	48	352	1,384	3,176
34	622	1,508	2,815	54	154	209	2,062	9,208	28,425
35	332	431	808	69	56	83	2,214	2,301	9,804
36	2,770	4,696	5,896	114	169	116	1,268	3,682	6,364
37	7	65	162	0	1	2	0	156	202

註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산업 번호별 산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15 음식료품, 16 담배, 17 섬유제품, 18 의복 및 모피,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20 목재 및 나무제품,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6 비금속 광물제품,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29 기계 및 장비제조업 N.E.C,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3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기타 운송장비, 36 가구 및 기타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부표 2〉 鑛工業部門 産業中分類別 成長要因

(단위 : %)

산업분류	총출하액증가율			사업체수증가율			사업체당출하액증가율		
	83~88	88~94	83~94	83~88	88~94	83~94	83~88	88~94	83~94
광공업	17.2	14.2	15.5	8.5	7.0	7.7	8.0	6.7	7.2
광업	10.5	−5.7	1.4	−0.7	−8.0	−4.8	11.3	2.5	6.5
제조업	17.3	14.4	15.7	8.9	7.3	8.0	7.7	6.6	7.1
15	11.9	12.3	12.4	1.0	3.9	2.6	10.8	8.1	9.6
16	6.1	6.9	6.5	0.0	−5.2	−2.9	6.1	12.8	9.7
17	16.0	6.9	10.9	7.9	4.6	6.1	7.5	2.2	4.5
18	16.9	10.3	13.3	10.9	6.0	8.3	5.4	4.1	4.6
19	24.6	0.2	10.6	12.9	3.3	7.6	10.4	−3.0	2.8
20	9.1	14.1	11.8	2.7	4.3	3.5	6.2	9.4	8.0
21	18.8	11.9	14.8	5.9	5.4	5.6	12.2	6.1	8.7
22	15.1	19.8	17.6	10.8	9.7	10.2	3.9	9.2	6.7
23	−1.9	14.7	6.8	5.9	0.0	2.6	−7.4	14.7	4.1
24	14.9	15.5	15.2	−1.9	6.4	2.6	17.1	8.6	12.3
25	22.9	14.5	18.2	12.8	8.0	10.1	9.0	6.0	7.4
26	15.6	16.2	15.9	3.3	5.4	4.4	11.9	10.2	11.0
27	15.7	13.0	14.2	7.3	3.5	5.2	7.8	9.2	8.6
28	18.9	19.9	19.4	8.4	14.2	11.5	9.7	5.0	7.1
29	26.6	17.3	21.5	14.4	11.4	12.7	10.7	5.3	7.8
30	30.4	23.6	26.7	−0.5	20.8	10.6	31.1	2.3	14.6
31	24.1	15.3	19.2	15.6	12.2	13.7	7.4	2.8	4.8
32	31.9	15.0	22.4	24.1	4.4	12.9	6.3	10.2	8.4
33	31.5	14.8	22.1	14.8	11.4	12.9	14.5	3.1	8.1
34	34.9	20.7	26.9	19.4	11.0	14.7	13.0	8.7	10.6
35	0.8	27.3	14.5	5.4	11.0	8.4	−4.4	14.7	5.6
36	23.8	9.5	15.8	11.1	3.9	7.1	12.7	5.4	8.1
37	88.5	53.2	68.0	56.2	16.4	33.1	20.7	31.6	26.2

註 : 산업분류는 〈부표 1〉과 동일.

論 評

朴 炳 亨
(東亞大學校)

이 논문은 기업집단(재벌)의 현황과 특징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제요인들이 기업집단의 경제적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비교적 만족스럽게 달성되고 있다. 최근 재벌-경제력집중의 문제에 대한 일반의 광범위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접하기 쉽지 않은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도 연구의 중요한 기여라고 하겠다. 관련 논의에서 많은 주장들이 흔히 명확한 경험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정책적 판단의 혼선도 여기에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경험적 증거의 모색을 선결과제로 보고 있는 논문의 기본적 입장은 올바른 것이다. 여기서는 방법론상의 한계점 및 회귀분석결과의 해석에 관련하여 약간의 의견을 밝히기로 한다.

논문의 초점이 '기업집단의 규모-성과-시장지위-다변화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다고 본다면, 그 분석방법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만 연구목적이 어떤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형의 설정 및 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상관관계의 파악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의의가 있다.

먼저 회귀모형의 설정이 이론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닌 만큼 모형이 임의적(ad hoc)이라는 한계는 불가피할 것이다. 또 결정계수값이 '횡단면 분석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높다는 표현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임의적 모형설정에도 불구하고' 설명력이 상당히 높았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겠다.

당초 관심의 대상이었던 시장력 및 다변화 변수들이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우선 기업집단이 관측단위인 경우에는 변수의 집계과정에서 정보가 왜곡 또는 상실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기업성과에 대하여 시장력 및 다변화 변수가 일방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외생변수라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결과에 교란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시장력을 가진 대기업들에서는 (노사문제 등의 맥락에서) 이른바 이윤배분(rent sharing)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피설명변수가 '이윤'변수가 아니라 '생산성'지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결과의 해석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노동의 질의 대리변수로 함은 논평자도 미국 자료를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 사용했었던 바이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사전검증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것도 특히 기업집단 또는 대기업부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경쟁적인 노동시장을 상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평균임금이 노동투입의 질로서 인간자본을 반영한다는 가정은 무엇보다 모든 기업이 동일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고 있고 일정시점의 평균임금은 (이윤배분 등을 통한) '노동가격'의 차이가 아니라 '노동의 질'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논평자가 사용했던 몇가지 검증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료상의 한계도 있는 만큼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연구과제일 것이다.

노동의 질이나 자본장비율의 효과는 피설명변수의 정의상 거의 자명한 것으로서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지만, 규모변수가 기업집단 및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흥미있는

점이다. 규모의 경제가 개별기업차원에서는 나타나지만 기업집단차원에서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집단차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규모의 불경제도 작용한다거나 대규모 집단의 경우 일부 계열기업의 나쁜 성과가 규모효과를 상쇄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본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주요 관심사인 시장력 및 다변화 변수들의 유의하지 못한 추정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형설정에 특정한 결과일 수 있는 만큼 '제한적 결론'으로 남겨두고 있지만, 가중평균 점유율이나 참여시장구조변수가 적어도 생산성 지수와 같은 효율성 변수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논문의 각주에서도 논의되듯이 기업이윤이 피설명변수일 경우와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기업집단의 비중, 시장지위, 다변화, 소유구조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기존의 많은 연구자료들이 있지만 비교적 상세하고 최신화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기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집단의 비중이나 활동에 대하여 몇가지 중요한 추세 및 양상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표 3〉에서는 상하위 기업집단간 규모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행의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논의가 요망된다. [그림 1]에서도 주로 상위집단의 경우에 비중의 증가추세가 확연하며 통계기준의 조정에도 변화가 적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주로 상위집단에 관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집중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과의 단순한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은 논문에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통계치의 직접적 비교는 오히려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우려가 크다. 일반집중의 통계적 추계 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의한 추세비교 이외의 경우에는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반집중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내용, 즉 일반집중으로 인한 폐해의 정도에 있다고 본다. 일반집중이 나쁘다면 왜 나쁜가, 어느 정도 나쁜가, 그리고 나라마다 같은 논의가 가능한가(특유화되지 않은 일반적 성격의 거래의 비중이 높고 경쟁체질이 통상적인 거래문화에서는 일반집중이 부정적인 거래행태나 성과를 초래할 우려가 비교적 약할 것이다) 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유분산이 문제라면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어느 정도 자연적인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재벌특유의 거래행태에 초점이 두어질 경우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그것이 과거 정책과 관행의 소산인 측면이 강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林 暎 宰

(本院 硏究委員)

본 논문은 우리나라 大規模 企業集團에 대한 基礎資料의 정비와 분석을 통하여 그 現況과 特徵을 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經濟力集中 및 大企業政策을 둘러싼 論爭에서는 서로의 논거를 확인할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이 시도하고 있는 大規模企業集團의 現況에 대한 기초자료 정비작업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기초연구작업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大規模企業集團이 갖는 속성으로서 다음의 네가지를 들고, 그중 統計的인 分析이 가능한 처음의 세가지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나라 大規模企業集團의 現況에 대한 分析을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들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네

가지 속성이란, ① 經濟 全體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다는 점, ② 그 系列企業들이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個別市場에서 獨寡占的인 地位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③ 系列企業간 복잡한 지분관계와 企業集團 總帥 및 家族의 소유지분에 의한 企業所有의 集中이 높다는 점, ④ 系列企業間 統合的 經營構造 및 집단적·협조적·상호의존적 기업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들 중 네번째 특성은 현재 정부의 對재벌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위 企業集團 內部去來 規制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企業集團 內部去來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지만, 보다 설득력 있는 이론적 근거나 경험적 증거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企業集團 內部去來現象의 分析에 필요한 企業資料가 아주 부족한 데에 많은 부분 기인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經濟 全體에서 企業集團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大規模企業集團의 사업구조조정이 鑛工業部門으로부터 첨단서비스산업 쪽으로 빠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공업통계자료에 근거한 經濟力集中指標는 실제의 모습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 全產業에서 大規模企業集團이 차지하는 比重 대신 鑛工業部門에서의 企業集團의 比重을 추계한 이유가 설명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광공업부문에 국한한 분석으로부터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기업집단의 비중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으면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기와 대규모기업집단의 占有率間에 「성장기·호황기=기업집단 비중 감소, 침체기·안정기=기업집단 비중 증가」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성장기 내지 호황기에는 수많은 中小規模企業의 활발한 창업과 활동에 의해 성장이 선도됨으로써 企業集團의 比重이 낮아지다가, 안정기에 들어서면 이들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企業集團의 比重이 높아지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물론 中小企業의 進入과 退出에 대한 자료가 정비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성장기 또는 호황기에 中小企業의 進入速度와 불황기에 中小企業의 退出速度에 대한 경험적 비교를 수행한다면 이는 매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제Ⅳ장 企業集團의 特性들간의 관계에 관한 實證分析에서는 1991~94년간의 上位 50大 企業集團과 上位 200大企業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집단 단위와 기업 단위로 각각 실증분석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시도는 모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上位 5大 企業集團 系列企業에 대해 dummy변수를 부여하며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본 논문의 第Ⅱ章 企業集團의 比重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上位 5大 企業集團의 점유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上位 30大 企業集團 가운데 上位 5大 企業集團이 차지하는 比重도 더욱 높아지면서 下位集團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본 논문에서는 30대 기업집단 계열기업에 대해 dummy변수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자 하다가 30위 이내의 기업집단과 여타 기업집단간에 특별한 차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위 200대 기업이 대부분 30대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본 논문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企業集團의 規模는 企業集

團의 成果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企業規模는 企業의 成果와 正의 關係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부분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정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내리고 있다(여기에서 규모는 총출하액으로 측정되었으며, 성과는 종업원 1인당(또는 임금 단위당) 출하액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大規模 企業集團들이 다양한 系列企業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다면(그것이 動態的 競爭力이든, 보다 長期的 利潤 追求이든), 1991~94년에 걸친 종업원 1인당(또는 임금 단위당) 출하액이라는 성과변수는 그러한 효과들을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결론부분의 정책적 시사점은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 실증분석에서 "이 모형에 의하면" 企業集團의 多邊化는 成果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따라서 현단계에서 企業 效率性 혹은 成果라는 측면에서 多邊化 등의 效果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다변화의 효과는 動態的 效率性 또는 動態的 競爭力과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A Quarterly Journal Published in Korean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Vol. 18, Nos. 3, 4 **Fall / Winter 1996**

Product Liability Law : Economic Effect and Implementation — *Kwang-shik Shin*, *Bon-chun Koo*
Comment: *Il-joong Kim / In-gyu Kim*

The Distribution of Consumer Price Changes in Korea — *Yoon-ha Yoo*, *Myung-kee Sung*
Comment: *Jong-kyu Park / Ki-seok Hong*

Evaluation of Structural Adjustment in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 — *So-mi Seong*
Comment: *Chul-kyu Kang / Joon-kyung Park*

Big Business Groups in Korea : Performance, Diversification, and Ownership Structure — *Jae-hyung Lee*
Comment: *Byong-hyong Bahk / Young-jae Lim*

For subscription to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please contac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O. Box 113, Chongnyang, Seoul, Korea
Fax : (961) 5092. Tel : (958) 4114

論評 및 書評 寄稿案內

本誌 編輯委員會는 本誌에 발표된 論文과 本院에서 발간된 單行本 및 각종 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들의 論評과 書評의 寄稿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硏究主題 및 그 內容과 관련되는 硏究方法論 또는 國家政策上의 爭點을 表出시켜 앞으로의 硏究課題와 政策方案 設定에 寄與하고, 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的인 批判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자는 趣旨에서 아래와 같은 要領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讀者 여러분의 많은 參與를 바랍니다.

〉아 래〈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30장 안팎(PC로 작성한 원고는 겉장에 200자 원고지 기준 총분량을 표시할 것)
2. **원고내용** : 論評은 해당 논문에 담긴 誤謬 혹은 爭點을 내용으로 하여 가급적이면 論文이 발표된 후 3개월 이내로, 書評은 해당 보고서의 主要內容 紹介, 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앞으로의 硏究課題 提示를 내용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된 후 6개월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3. **제 출 처** : 우편 또는 인편으로 『KDI 政策硏究』 編輯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4.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本院이 정한 審査節次를 거쳐 싣게 되며, 채택된 원고는 稿料를 드림.

研究報告書 案內

第71-01卷	企業整理에 대한 意見	金滿堤
第71-02卷	金利引下의 可能性	金滿堤
第71-03卷	農業開發戰略과 米穀需給政策의 評價	金滿堤
第72-01卷	總資源豫算을 위한 成長戰略(1972~73年)	KDI
第72-02卷	새 政策의 選擇을 위한 決斷	金滿堤
第72-03卷	1973年度 豫算規模의 計測	朴宗淇 金完淳
第72-04卷	開館紀念 심포지움 發表論文集	KDI
第72-05卷	韓國經濟 安定化를 위한 提言	下村治
第72-06卷	成長과 安定政策에 관한 硏究	KDI
第72-07卷	長短期計劃을 위한 諸模型(잠정)	金榮奉 外
第73-01卷	主要原資材에 대한 國際市場 分析과 價格展望	KDI
第73-02卷	社會保障年金制度를 위한 方案	朴宗淇 金大泳
第73-03卷	韓國經濟의 產業聯關分析	宋丙洛
第73-04卷	主要穀物의 國際需給事情과 價格動向	KDI
第73-05卷	우리나라 敎育投資의 經濟的 價値分析	南祐鉉 鄭暢泳
第73-06卷	우리나라 交通計劃과 政策	宋丙洛
第74-01卷	政府 主要農產物 備蓄事業效果分析	文八龍 柳炳瑞
第74-02卷	輸出 100億弗 目標와 歐洲市場展望	洪元卓 外
第74-03卷	重化學工業推進을 위한 國家持株會社의 活用方案	司空壹 外
第74-04卷	公企業 任員의 社會的 背景	兪 炅
第75-01卷	豫算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金迪敎
第75-02卷	서울市內 生產 및 所得推計(1973)	金大泳
第75-03卷	우리나라 商品輸出의 長期展望(1973~81)	宋熙秊 外

第75-04卷	우리나라 敎育의 需要形態 및 經濟成長 寄與分析	金榮奉
第75-05卷	우리나라 人口의 推計(1960~2040)	金大泳
第75-06卷	鐵鋼景氣의 測定分析과 豫測模型	金胤亨
第75-07卷	鐵鋼產業의 景氣와 長期需要展望	宋熙秊
第75-08卷	서울市內 生產 및 市民分配所得(1974)	金大泳 洪性德
第75-09卷	韓國製造業의 賃金隔差構造	金光錫 外
第75-10卷	韓國 首都圈의 空間經濟分析	宋丙洛
第75-11卷	韓國 에너지產業의 需要分析과 豫測	金胤亨 金炳穆
第75-12卷	우리나라 貿易構造의 推定(1977~86)	洪元卓
第75-13卷	內國稅의 稅目別 稅收豫測方法	朴宗淇
第75-14卷	纖維工業의 成長過程과 生產構造	金榮奉
第76-01卷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特徵(1965~70)	金大泳 李孝求
第76-02卷	長期雇傭 및 技術人力計劃	金秀坤
第76-03卷	서울市內 生產 및 市民分配所得(1975)	金大泳 洪性德
第77-01卷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分析	姜奉淳 文八龍
第77-02卷	IBRD借款 中規模型 水利事業 評價分析	文八龍 外
第78-01卷	1968~73年 韓國鑛工業 產業資本스톡推計	朱鶴中
第78-02卷	合板工業의 成長	宋熙秊 孫炳岩
第79-01卷	우리나라 製造業의 生產性分析(1966~75)	金迪敎 孫讚鉉
第79-02卷	輸送部門의 投資事業審査指針	鄭丙壽
第79-03卷	韓國海外移民硏究	洪思媛 金思憲
第79-04卷	石油化學工業의 長期展望	金浩卓
第79-05卷	韓國의 育兒費와 出產力	具成烈
第79-06卷	韓國機械工業의 構造와 展望	金迪敎 編
第79-07卷	韓國의 칼라TV工業	金榮奉
第79-08卷	韓國經濟의 短期豫測模型	李天杓

第79-09卷	韓國의 輸入構造 및 輸入政策	徐錫泰
第80-01卷	水資源·工業團地造成部門의 投資事業審査分析	林栽煥
第80-02卷	인플레와 企業成長能力	張榮光
第80-03卷	農業機械化의 政策課題	文八龍
第80-04卷	産業別 投入係數의 變化와 推定	金圭洙
第80-05卷	韓國의 自動車工業	李徹熙
第80-06卷	農業機械化의 投資效果分析	林栽煥
第81-01卷	社會保障制度改善을 위한 硏究報告書	朴宗淇 外
第81-02卷	韓國金屬工業의 展望과 政策課題	南宗鉉 編
第81-03卷	自動車工業의 發展方向과 政策	金榮奉
第81-04卷	福祉社會의 人力政策과 職業安定	金秀坤 外
第81-05卷	固體廢棄物 管理現況과 改善方案	鄭文植
第81-06卷	5次計劃을 위한 都市化問題의 硏究	宋丙洛
第81-07卷	韓國製造業의 産業集中分析	李奎億 徐鎭敎
第81-08卷	農業信用事業의 經濟性分析	林栽煥
第81-09卷	韓國 資本主義經濟體制 發展을 위한 硏究	黃秉泰
第81-10卷	韓國의 産業誘因政策과 産業別 保護構造分析	南宗鉉
第81-11卷	對外去來自由化와 韓國經濟	金重雄
第81-12卷	景氣綜合指數作成에 관한 硏究報告書	徐相穆 編
第81-13卷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徐相穆 外
第82-01卷	糧政轉換을 위한 食糧安保備蓄制度	柳炳瑞
第82-02卷	名目 및 實效保護率 構造의 長期的 變化	金光錫 洪性德
第82-03卷	韓國製造業의 産業別 生産構造	金栽元
第82-04卷	勞使關係 事例硏究	金秀坤 外
第82-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2年度)	朴宗淇 李奎億 編
第82-06卷	1960~77年 韓國産業資本스톡推計	朱鶴中 外

第82-07卷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綜合對策	柳炳瑞 外
第82-08卷	主要農業政策 改善方案	柳炳瑞 外
第82-09卷	產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支援施策의 改編方案	楊秀吉
第83-01卷	醫療保險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河淸 外
第83-02卷	世界經濟環境變化와 當面課題	金重雄
第83-03卷	勞使關係 政策課題와 方向	金秀坤 編
第83-04卷	80年代 勞使關係發展을 위한 懇談會 報告書	KDI
第83-05卷	勞使協議制 硏究	朴世逸 外
第83-06卷	都給組織의 現況 및 都給去來의 增進方案	金栽元
第83-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3年度)	崔 洸 編
第83-08卷	短期金融市場의 當面課題와 發展方向	李德勳
第83-09卷	經濟安定化政策과 企業經營의 改善	洪炳裕
第83-10卷	都市行政의 發展的 機能과 改善方向	黃仁政
第84-01卷	韓國稅制의 主要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編
第84-02卷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閔載成 外
第84-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4年度)	金重雄 崔 洸 編
第84-04卷	金融國際化의 當面課題와 政策方向	金重雄 外
第84-05卷	인플레期待와 經濟安定	李啓植
第84-06卷	市場과 市場構造	李奎億 外
第85-01卷	產業高度化에 따른 農業構造의 改編方向	宋大熙 柳炳瑞
第85-02卷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李奎億 外
第85-03卷	乘法 季節ARIMA模型의 構造識別方法	呂運邦 孫英淑
第85-04卷	海外先物市場의 活用方案	李 烋 外
第85-05卷	減價償却制度와 資本所得課稅	郭泰元
第85-06卷	第2金融圈의 發展과 業務領域調整	李德勳
第85-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5年度)	李啓植 郭泰元 編

第85-08卷	特許制度의 經濟的 效果分析	鄭鎭勝
第86-01卷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郭泰元 李啓植 編
第86-02卷	金融產業發展에 관한 硏究, 1985~2000	朴英哲 外
第86-03卷	私學運營의 課題와 改善方案	朴烜求 外
第86-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6年度)	郭泰元 李啓植 編
第86-05卷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 波及效果	閔載成 外
第86-06卷	Social Development in Action	黃仁政
第86-07卷	Financ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金重雄 編
第86-08卷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李奎億 編
第86-09卷	證券市場의 發達과 機關投資家의 役割	李德勳 張忠植
第87-01卷	商品去來所의 設立에 관한 硏究	李 烋 外
第87-02卷	公企業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技法	宋大熙 外
第87-03卷	우리나라 金融政策運營現況과 改善方案	鄭健溶
第87-04卷	Macro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5卷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7年度)	延河淸 李啓植 編
第87-07卷	에너지部門의 政策課題와 改善方案	李 烋
第87-08卷	住宅金融의 現況과 發展方向	姜文秀 金重雄
第87-09卷	地方工業의 特性과 育成政策	金鍾基 外
第88-01卷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硏究	姜信逸
第88-02卷	社會保障制度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河淸 外
第88-03卷	金融先物과 옵션市場의 活用方案	李 烋 外
第88-04卷	社會福祉傳達體系의 改善과 專門人力活用方案	徐相穆 外
第88-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8年度)	郭泰元 李啓植 編
第88-06卷	日本經濟社會의 進化와 韓日貿易	李奎億 外

第88-07卷	輸入自由化의 經濟的 效果와 產業調整政策	金光錫
第89-01卷	리스產業의 發展方案	李 烋 外
第89-02卷	研究開發과 市場構造 및 生產性	金迪敎 趙炳澤
第89-03卷	產業技術開發支援政策의 現況과 改善方案	鄭俊石
第89-04卷	國家報勳報償制度의 改編方案	閔載成 金龍夏
第89-05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	李奎億 編
第89-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9年度)	沈相達 編 李啓植
第89-07卷	金融環境變化와 綜合金融會社의 位相	南相祐 外
第89-08卷	經濟의 國際化와 中小企業의 產業調整	朴埈卿
第90-01卷	稅收推計 模型開發에 관한 研究	盧基星 外
第90-02卷	韓國의 適正賃金	張鉉俊 金在源
第90-03卷	地方公企業의 課題와 發展方向	宋大熙
第90-04卷	企業集團과 經濟力集中	李奎億 李在亨
第90-05卷	醫療保險制度의 改善을 위한 政策方案	權純源 外
第90-06卷	證券產業發展을 위한 研究	李永琪 外
第90-07卷	地域發展과 地方財政	李啓植 外
第90-08卷	韓國의 退職金制度와 企業年金制度 導入方案	閔載成 外
第90-09卷	中產層實態分析과 政策課題	延河淸 外
第90-10卷	中小企業의 產業調整과 中小企業支援施策의 改善方向	姜文秀 外
第90-11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II)	李奎億 編
第90-12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0年度)	宋大熙 編 權純源
第90-13卷	經濟開放과 巨視經濟運用	朴元巖 外
第90-14卷	國民年金財政의 安定化를 위한 政策課題 및 方向	南相祐 外
第91-01卷	開放化와 下都給體制의 改編	金周勳 趙觀行
第91-02卷	法經濟研究(I)	李奎億 外

第91-03卷	金利自由化의 課題와 政策方向	南相祐 外
第91-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1年度)	李啓植 盧基星 編
第91-05卷	國民年金基金의 福祉部門 活用方案	閔載成 外
第91-06卷	產業化過程과 經濟制度의 對應	李奎億 編
第92-01卷	우루과이라운드의 規律分野協商과 產業·貿易政策의 改善方向	南宗鉉 張義泰
第92-02卷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中央·地方財政機能의 再定立	宋大熙 盧基星 編
第92-03卷	廣告의 產業組織과 規制	李奎億 劉承旻
第92-04卷	舊東獨의 私有化方案 및 失業對策	高日東 外
第92-05卷	構造變化와 雇傭問題	朴埈卿 金政鎬
第92-06卷	製造業의 總要素生產性動向과 그 決定要因	金光錫 外
第92-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2年度)	宋大熙 柳一鎬 編
第92-08卷	韓國經濟의 產業貿易模型	李元暎
第93-01卷	國內銀行의 經營效率性 比較分析	孫承泰
第93-02卷	產業保護와 誘因體系의 歪曲	兪正鎬 外
第93-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3年度)	宋大熙 文亨杓 編
第93-04卷	韓國의 老齡化 推移와 老人福祉對策	閔載成 外
第93-05卷	低所得層의 生活安定과 自立對策	權純源 外
第94-01卷	地域金融의 活性化와 새마을금고의 發展	李德勳 外
第94-02卷	產災保險 財政運營方式 開發에 관한 硏究	閔載成 外
第94-03卷	美日構造調整協議의 展開와 競爭政策	崔鍾元
第94-04卷	國際化時代의 韓國經濟運營	左承喜
第94-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4年度)	盧基星 柳一鎬 編
第94-06卷	外國人直接投資와 投資政策	李弘求
第94-07卷	우리나라 自動車產業의 當面課題와 產業組織政策	劉承旻 外
第94-08卷	競爭政策의 國際比較：美國·日本·獨逸	申光湜

第95-01卷	金融自律化에 따른 生命保險產業의 對應方案	羅東敏
第95-02卷	韓·臺·日의 輸入依存構造比較	兪正鎬
第95-03卷	法經濟硏究(II)	李奎億 外
第95-04卷	國際化時代의 金融制度	崔範樹 李炯周
第95-05卷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와 對北投資 推進方案	全洪澤 外
第95-06卷	調達市場의 效率化·開放化 方案	南逸聰 外
第95-07卷	國民年金制度의 財政健實化를 위한 構造改善方案	文亨杓
第95-08卷	韓國敎育財政의 現況과 改革方向	尹建永
第96-01卷	OECD加入과 資本自由化	朴元巖
第96-02卷	金融의 效率性提高와 金融規制 緩和	姜文秀 外
第96-03卷	金融自由化와 金融監督	姜文秀
第96-04卷	製造業 總要素生產性의 長期的 變化	洪性德 金政鎬
第96-05卷	北韓의 經濟特區	朴貞東
第96-06卷	金融의 汎世界化와 證券產業의 構造改編	李德勳 崔範樹
第96-07卷	南北韓 經濟統合時의 經濟·社會 安定化 對策	朴 進
第96-08卷	中小企業의 構造調整과 知識集約化	金周勳
第96-09卷	韓國 物價變動構造의 分析과 政策對應	朴佑奎 外
第96-10卷	雇傭對策과 人的資源開發	李周浩
第96-11卷	地域利己主義의 經濟的 理解와 效率的 葛藤調整方案	金在亨
第96-12卷	經濟世界化時代의 巨視經濟運營	左承喜 編
第96-13卷	與信專門金融產業의 特性과 發展方案	李德勳 外
第96-14卷	中小·벤처企業의 發展과 場外市場의 活性化	崔範樹 李基煥
第96-15卷	中央·地方政府間 關係 및 財源調整	李啓植 外
第96-16卷	경제체제 전환기의 노동정책	조동호
第96-17卷	地方化時代의 政策課題와 制度改善方向	盧基星 編

新 刊 案 內

南北韓 經濟統合時의 經濟·社會 安定化 對策

半洋裝/A5新/148쪽/定價 5,000원/朴 進 著

金融自由化와 金融監督

半洋裝/A5新/256쪽/定價 9,000원/姜 文 秀 著

金融의 汎世界化와 證券產業의 構造改編

半洋裝/A5新/202쪽/定價 7,000원/李德勳·崔範樹 著

韓國 物價變動構造의 分析과 政策對應

半洋裝/A5新/326쪽/定價 10,000원/朴 佑 奎 外

金融의 效率性提高와 金融規制 緩和

半洋裝/A5新/164쪽/定價 6,000원/姜 文 秀 外

中小企業의 構造調整과 知識集約化

半洋裝/A5新/286쪽/定價 9,000원/金 周 勳 著

雇傭對策과 人的資源開發

半洋裝/A5新/346쪽/定價 12,000원/李 周 浩 著

中央·地方政府間 關係 및 財源調整

半洋裝/A5新/242쪽/定價 10,000원/李 啓 植 外

創業支援金融制度의 發展方案

半洋裝/A5新/256쪽/定價 9,000원/李 德 勳 外

經濟世界化時代의 巨視經濟運營

半洋裝/A5新/284쪽/定價 11,000원/左 承 喜 編

中小·벤처企業의 發展과 場外市場의 活性化

半洋裝/A5新/324쪽/定價 12,000원/崔範樹·李基煥 著

KDI 圖書會員制 案內

■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硏究院이 발간하는 모든 刊行物을 우송해 드림.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 會　　費 : 100,000원

■ 加入方法 :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회비를 납입하거나,

• 가까운 우체국의 本院 우편대체계좌 (계좌번호 : 010983-31-0514919)에 납입하면 됨.

■ 問議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 130-012

KDI 발간자료상담실(Tel. 958/4326~8)

KDI 圖書 販賣處

• 서울 :	교보문고(정부간행물코너)	Tel. 397-3628
	종로서적(3층 사회관)	Tel. 733-2331
	영풍문고(정부간행물코너)	Tel. 399-5632
• 부산 :	영광도서(정부간행물코너)	Tel. 816-9500
• 대구 :	학원서림(1층 2매장)	Tel. 425-0050